



“과기정책 전담부처 부활 정부조직개편안 발의할 것”

이상민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글 | 이덕환 _ 본지 편집위원장 duckhwan@sogang.ac.kr

제 18대 국회에 우리 과학기술계의 든든한 후원자가 등장했다. 대전 유성구 출신의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바로 그 사람이다. 변호사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와 지난 9월에 출범한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과학기술계의 대변인으로 나선 이상민 의원을 만났다.

Q. 이 의원께서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아주 어릴 적부터 과학기술에 대하여 남다른 호기심을 갖고 있었고, 한때 과학자를 꿈꿨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장애인으로써 겪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저 같은 장애인도 추기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과학기술에 대하여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된 것은 17대 국회에 몸담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재정경제위에서 우리 나라 경제 전반을 살펴보면 그 동안 과학기술이 우리 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결정적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고, 앞으로도 우리 나라 성장동력의 중심핵으로 과학기술이 진흥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는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메카로 과학기술연

구소들과 과학기술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구에서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구소와 과학기술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또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의 진흥에 대한 뜻도 남다르다는 것을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Q. 과학기술 분야의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어떤 과제가 남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도 그 때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를 막아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의 적극적인 반대 표명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 폐지를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운용을 살펴보면 역시 우려했던 대로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총괄적 컨트롤 타워가 없이 중구난방,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이 많은 교육부문에 비해 과학기술부문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도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적으로 전담하여 이끌고 나가는 전담부처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부총리

체제보다 더욱 강력한 총괄 권한을 가지고 명실 공히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과학기술부 폐지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루 빨리 과학기술정책 전담 부처의 부활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를 다시 분리하여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처를 부활시키고, 총괄적 기획과 조정 등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개정안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Q.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첫째,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이 없습니다. 과학기술은 본질적으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으로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관여를 극도로 제한하여 과학기술자들에게 자유롭게 맡겨두어야 할 영역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욱 국가는 물론 인류 발전전략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과 미래의 과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말로만 과학기술 진흥을 외쳐서는 안 됩니다.

둘째, 당장 돈이 되는 연구만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과학기술에 대해 무지한 탓입니다. 과학기술은 본래 당장 주판알을 튕기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더욱이 당장 돈 되는 것만 내놓으라고 강요한다면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는 정말 어두워지게 됩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결함인 소통의 부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영역은 전문영역인 만큼 그 전문가인 과학기술인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그 뒷받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는커녕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넷째,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노력의 요체는 과학기술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과학기술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 근로자처럼 시간에 맞춰 일을 시키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인들의 열정이 없으면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Q. 최근에 발표된 '577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2012년까지 국가 총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5%로 확대하고, 7대 기술 분야의 중점 투자와 7대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과학기술 7대 강국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측면만을 너무 강조했고, 사실상 과학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요체인 과학기술인들의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이 뒷받침되어야만 577전략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5년의 40조 원에 비해 1.6배 이상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언뜻 외견상 의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 몫의 3배인 민간 R&D를 어떻게 유도해낼 것인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어찌 보면 국가의 부담을 민간부문에 떠넘기는 책임전가적 인상도 느껴집니다. 기초 원천분야 지원 비율을 50%로 배증하겠다고 하는데, 그 방향은 백번 동의하지만, 과연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기초과학연구의 육성을 위해 당장 돈이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 성과에 대해 단기적으로 급급하지 않으면서 과학기술인들에게 전적으로 맡겨 주고, 정부는 과학기술인들을 전폭 신뢰하고 뒷받침해주어야만 합니다.

Q.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소위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에 대해 뭘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만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등 키워드가 너무 많아 핵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 기초과학연구 육성이라는 취지로 가속기 설치, 기초과학아시아센터 등 여러 구상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그 이후 정치적 고려를 거치면서 혼돈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계의 논란이 많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처음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몇몇 사람의 의견만 반영되었지, 과학기술계 전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데는 매우 소홀했습니다. 결국 부실한 졸속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계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소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의 입장이 최우선적으로 전폭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초과학연구를 육성한다면 일선의 과학기술인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소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실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디자인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늘 종전 정권과는 180도 바뀐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싶겠지만 국가의 자원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자산을 활용해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대덕 출연연구소들과 대학 R&D 역할과의 조정 등 기존 과학기술연구 시스템과의 역할의 조율이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소홀히 했다가는 쓸데없는 중복 투자로 인한 국민 혈세의 낭비는 물론 소모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먼저 우수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그를 통하여 하루빨리 성공모델을 창출한 다음, 그 성과를 다른 지역에 확산 연계시키는 전략을 채택해야만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3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어 이미 우수한 인적, 물질 연구성과물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대덕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이 견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눠 먹기 식으로 전략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행정도시의 성격을 축소·변질시키려는 의도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약용해서도 안 됩니다.

Q. 현안에 허덕이는 교육 행정 속에서 '과학기술' 행정을 살려내는 묘안이 있으신지요?

현안이 많은 교육에 과학기술이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습니다. 걱정을 넘어 과학기술의 위기감마저 듭니다. 교육예산은 30조 원으로 교과부의 과학기술예산 3조 원의 10배에 이릅니다. 조직도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왜소하기만 합니다. 교육에 결방살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정책의 총괄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처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공감대가 구축되도록 동료 의원들의 설득에 나설 생각입니다. 만약

현 정부 임기 내 실현이 어렵다면 다음 정부에서 과학기술부가 부활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이 그런 약속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전이라도 과학기술 정책이 교육 정책에 밀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이슈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정부를 압박해나가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자신 그런 차원의 노력을 해왔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8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국회가 아닌 대덕에서 했습니다. 그 때 제가 위원장과 한나라당, 민주당 간사를 설득하고,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 지극히 이례적으로 대덕에 가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출연연구소로부터 출연연의 역할과 현황, 현안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원자력 연구원 등 몇 개 출연연구소 현장 참관을 하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제 제안에 의하여 2일 동안 형식은 국정감사이었지만 사실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위촉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고, 일선의 과학기술인들과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국회의원들 사이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된 것이 큰 성과였음을 자부합니다.

Q. 과학교육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견입니다만 지금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과학교육은 뒷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온 나라가 입시교육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의 과학교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어 교육의 첫걸음부터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언론매체에서도 과학 프로그램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 관심 속에서조차 과학기술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은 바로 초등학교 과학교육 부실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에 대한 마인드가 없고, 비전도 없는데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학생들의 장래희망에서 '과학기술인'이 연예인과 체육인에 밀려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과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학실험실에서 자유스럽게 실험을 하고, 미래 과학기술인이 되기 위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 학생들에 대한 과학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출연연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수선했습니다. 겉으로는 조금 진정된 듯하지만 여전히 내



부적으로는 불안감이 많습니다.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연 연구소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흔들려 놓곤 하는데, 이번 이명박 정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선의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함에도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그리고 밀실에서 밀어붙이려는 것에 대하여 저항감이 큼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과학기술인들의 좌절감입니다. 과학기술계 개편의 구체적인 이유와 기대효과에 대한 아무런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그냥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추진하려다가는 개혁은커녕 소모적 갈등과 위축만 야기된 것입니다.

제가 돌아본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기관 흔들기 → 연구경쟁력 저하 → 우수인재 유입 실패 → 국가 경쟁력 위기 등의 악순환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현실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MB정부의 철학과 목표가 없고, 방향조차 가늠하기 힘든 과학계 개편 움직임이 연구현장 과학자들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연연 연구원들도 10명 중 9명은 스스로 출연연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일방적·독선적으로 추진되는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는 개탄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개혁의 추진 주체도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추진방식도 밀실에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역사적·문화적 차이가 큰 외국을 막연하게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 등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세워 추진해야 하며,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 추진하지 말고 공감대를 구축한 상태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우리 과학기술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부 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총괄 시스템의 부실과 과학기술인의 사기저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사업화에 이르는 일련의 R&D 생태계를 총괄하는 정부기능이 뿔뿔이 나뉘져 있는 것이 중대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분석 또는 평가 능력 역량이 미숙해서 과학기술을 오히려 왜곡 굴절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거나 중장기적 연구를 소홀히 하는 폐해는 평가기관의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니다. 실패도 큰 가치의 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성공이 보장되는 연구개발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우수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제대로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에 대한 신분보장, 특히 대학과의 형평성 정년 연장, 연금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합니다.

Q, 우리 과학기술계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과학기술인은 우리 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고 자긍심의 근거입니다. 정말 신명나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뒷받침해드려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말로만 과학기술입국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새 정권 출범 이후 자긍심을 훼손케 한 처사가 많아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또한 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서 과학기술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신명나게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의 추진과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앞으로도 과학기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